

올 건설공사비 672억 미리 본다

홍천군 조기 발주 통해 경제 활성화 예산절감·부실예방 등 1석4조 효과

【홍천】홍천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기반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부터 측량, 설계 합동작업을 했으며 16일 현재 설계를 모두 마무리했다. 군은 건설공사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체 설계를 위한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설계능력 함양, 예산 절감, 부

실공사 예방 등 1석4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자체설계사업 302건 145억9,500만원, 용역설계사업 120건 526억 800만원 등 총 422건 672억 300만원 규모다.

군은 올해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지난해 제2회 추경에 확보, 실시설

계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미 내면 읍전1리 일송정교 등 6건은 착공한 상태다.

자체 설계한 사업도 이달 중 계약 및 착공할 예정이다.

김승거 군 건설방재과장은 “연말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균형 집행을 순조롭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영기자

강원조달청장에 황환민 과장



제33대 강원조달청장에 철원 출신인 황환민(57·사진) 서울조달청 자재구매과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은 황환민 본청 과장을 강원조달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황 청장은 철원 와수초와 김화중, 신철원고, 동양공전을 졸업하고 연세대와 강원대에서 각각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원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인천조달청 자재구매과장 등을 지냈다. 안은복

강원도 발주기관 공사입찰에 '신기술 과잉 적용' 지적

강원도 내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공사 입찰에 신기술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일 공사에 10가지 이상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종합건설업체는 사실상 면허만 빌려주는 형태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16일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와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실선)의 간담회에서 '시설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적성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발주청은 신기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주 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사

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신기술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도 산하의 한 사업소의 지난해 신기술 적용 발주 현황을 보면, 공사비 2억원 이상 발주 물량 45건 가운데 33건이 신기술이 적용됐다. 총 적용된 신기술은 114건으로 공사 1건당 평균 3.56개의 신기술이 적용된 셈이다.

도 건설업계 전체 공종의 70~80%까지 신기술이 적용되고 일부는 10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기술이 100%가 적용되면 실제 공사는 신기술을 가진 하청업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공사에 10건 이상 사례도 일부 전체 공정의 100%도 나와 원도급사 역할 크게 위축

기술 보유업체와 수의계약 유착 등 비리발생 소지 우려

원도급사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실상 종합건설업체는 면허만 빌려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도 건설업계가 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약하기 때문에 유착 등 비리 발생 우려가 크고, 입찰에 특정 특허공법만 명시할 경우 시공자가 더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는 유사 특허공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기술 보유업체가 무리한 하도급 계약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을 가진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이 많아지면 원청사는 사실상 관리자

역할 밖에는 못한다"면서 "도 조례로 신기술 적용을 일정 부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도 건설업계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5년 말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공포·시행한 상태다.

도 건설업계는 기계설비 분리발주로 건축물의 급배수나 냉난방, 배관설비 등의 성능 저하나 오작동 가능성이 높아졌고,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